

건설동향브리핑

제547호 (2016. 2. 1)

■ 정책 · 이슈

- 1/4분기 SOC 사업 중심으로 재정 조기 집행 강화
- 1/4분기 주요 국가별 해외사업 잠재 리스크 전망

■ 경영 · 정보

- 저유가 동향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

■ 경제 동향

- 2015년 주택연금 가입자 11.4% 증가, 지방에서 높은 증가율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2016년 불확실성과 위기 대처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4분기 SOC 사업 중심으로 재정 조기 집행 강화

- 소비절벽, 중국 증시 폭락 등 대외 리스크 선대응, 관련 공사 발주 증가 예상 -

■ 1/4분기에 정부 재정 조기집행 총력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1/4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심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1/4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
 - 지난 2015년 1/4분기보다 중앙정부 4조원과 지자체 4조원, 총 8조원 예산의 추가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함.

■ 올 상반기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224.9조원 배정

-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금액이 여유 있게 배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올 상반기에는 전체 예산의 68%,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224.9조원이 배정됨.
 - 기획재정부 1월 19일자 예산집행지침 통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전 3.5조원의 예산배정과 함께 상반기 58%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힘.
 - 최근 4~5년 간 실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계획보다 높았고 또한, 올해 배정된 예산 수준을 감안, 올 상반기 예산 집행액은 18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역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연도	상반기 예산 배정		상반기 예산 집행 계획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2009	173.6	70.0	156.1	60.6
2010	178.2	69.8	162.8	60.0
2011	177.7	67.3	156.2	57.4
2012	197.9	70.0	166.1	60.0
2013	213.7	71.6	173.7	60.0
2014	202.5	65.4	171.0	57.1
2015	219.5	68.0	183.6	58.6
2016	224.9	68.0	-	58.0

주 : 국회의 예산 확정 후 예산배정→자금배정→자금집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됨. 상반기에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하여 예산배정을 집행계획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자료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계획(2015.12.8), 예산집행지침 통보(2016.01.19) 보도자료를 재구성

■ 국내 소비절벽 우려 및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선대응 조치

- 한편, 1/4분기 예산 조기집행 강화는 다소 이례적인데, 이는 소비세 인하조치 종료로 인한 국내 소비절벽과 최근 중국발 리스크 확대에 선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방침은 최근 수년 동안 반복해온 기조임. 그러나, 올해 1/4분기 예산 조기집행 강화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 회복세를 주도했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해부터 종료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절벽’을 1/4분기 재정집행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으로 판단됨.
 - 또한, 연초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발동 이후 중국 증시가 2015년 12월 대비 20% 이상 하락, 최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선대응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 SOC 사업 중심으로 1/4분기 조기 집행률 높일 방침 : 지자체 관련 사업 발주 증가 예상

- 정부는 SOC 사업을 중심으로 1/4분기 예산 집행률을 높일 계획으로, 1/4분기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련 사업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일호 장관의 1월 26일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발표에 의거, 기획재정부는 다음 날인 1월 27일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함.
 - 이 회의에서 기재부는 SOC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각 부처·공공기관은 세출예산집행심의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요인을 제거하기로 함.
 -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출연금 등 일선 현장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집행을 관리할 방침으로, 국지도와 산단 진입도로, 상하수도·농업기반 정비 등 지자체 보조 사업은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실집행액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자체 조기집행을 최대한 독려해 상반기 동안 56.5% 집행하고 1/4분기에 작년 동기의 22.7%보다 1%p 높은 23.7%를 집행하기로 함.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1/4분기 주요 국가별 해외사업 잠재 리스크 전망¹⁾

- 리스크 및 위기 대응의 시급성 분석을 중심으로 -

■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 주요국 수주 실적 감소 및 잠재 리스크 증가세 지속

-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저유가 지속 등으로 사업 수주 기회는 감소하고, 수행 중인 사업의 잠재 리스크는 대형 사업 중심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경제 불안과 시장 환경의 변동 심화로 국내 기업의 수주 계획이 위축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잠재 리스크 증가는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1/4분기에 중동과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수행 중인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준공 시점에 도달하는 사업 중심으로 손실의 최소화 대책이 시급함.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베네수엘라, 칠레 등의 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5,000억 원 이상 규모 사업의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함.

■ 조기경보체계(Risk-EWS)에 의한 주요 공종 · 권역 · 국가별 잠재 리스크 전망

- 2016년 이후 대형 사업의 준공 시점이 순차적으로 도달하면서 실적이 표준 계획 진도 (Standardized Progress)를 크게 벗어난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리스크관리가 중요함.
 - 이라크(17.6%), 사우디아라비아(11.4%), 쿠웨이트(9.1%), 우즈베키스탄(5.8%), 카자흐스탄(5.7%)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리스크 민감도 지수(SI)가 클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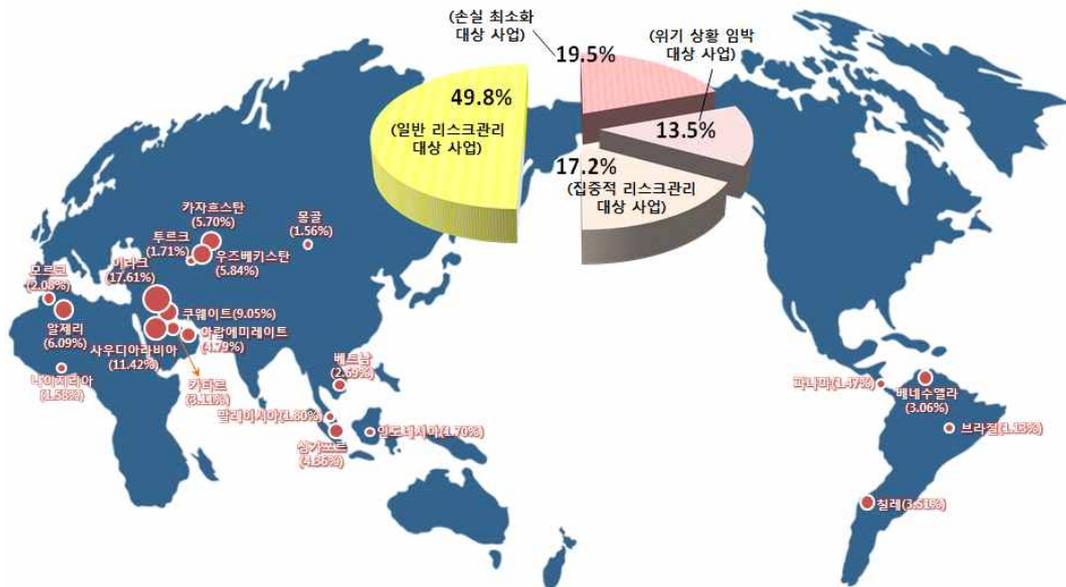
<산업 전체에 미치는 잠재 리스크의 민감도 지수와 주요 사업 건수>

구분	MENA	Asia Pacific	America/Europe	합계
건축	6.91% (2건)	5.92% (11건)	0.01% (0건)	12.8% (13건)
토목	9.57% (12건)	3.55% (3건)	0.14% (0건)	13.3% (15건)
산업설비	41.28% (41건)	22.76% (28건)	9.78% (9건)	73.8% (78건)
기타 (전기, 통신, 용역)	0.03% (0건)	0.04% (0건)	0.02% (0건)	0.09% (0건)
합계	57.8% (55건)	32.3% (42건)	9.9% (9건)	100% (106건)

주 : ()는 산업 전체의 잠재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건수

1) 본고는 2015년 1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구축한 '해외사업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를 통해 공종별 · 권역별 · 규모별 해외사업 리스크 지수(IPRI)를 분석한 결과임. 2016년 1월 18일자 건설동향브리핑 제545호에 관련 주제가 게재되었음.

<주요 국가별 해외사업 잠재 리스크 전망과 대응 수준별²⁾ 사업 비중>



■ 진출국의 불안정한 환경 지속, 선제적 리스크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절실

- 최근 중동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 실적 (Actual Progress)이 표준 계획(Standardized Progress)을 크게 벗어나기 시작하여 조기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함.
 - 2010년 이후 국내 기업의 시장 다변화에 대한 노력으로 건설영토가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잠재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기존의 기술력 기반 프로젝트관리 체계의 한계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시장과 상품의 다변화에 맞춤형 기업의 역량 강화와 리스크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함.
 - 리스크와 위기 대응이 시급한 사업 건수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프로젝트 수행과 체계에 대한 체질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시점임.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2) ‘일반 리스크관리 대상 사업’은 사업 진행 현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업, ‘집중적 리스크관리 대상 사업’은 표준 계획 진도(Standardized Progress)에서 이탈이 커 집중적인 관리 활동 없이는 공기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업, ‘위기 상황이 임박한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예정된 준공 시점에 거의 도달했지만 실적(Actual Progress)이 80~100%를 달성하여 위기 대응이 없을 경우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사업, ‘손실의 최소화 대상 사업’은 준공 시점에 실적이 80% 미만을 달성하여 공기 지연 또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여 직·간접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의미함.

저유가 동향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¹⁾

- 추가 하락보다 장기화 여부가 더 큰 문제, 시장 다변화 전략 등 필요 -

■ 공급 과잉 기조 아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례 없는 저유가 행진

- 현재 배럴당 30달러 초반 수준의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18개월 만에 70% 가량 급락한 것으로, 2015년 한 해에만 32%가 하락하였음.
- 2015년 브렌트유의 평균 유가는 배럴당 약 53달러로 지난 4년 평균 유가인 107.69달러보다 65달러 이상 낮음. 또한 WTI의 평균 유가는 배럴당 약 49달러로 이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 유가 95.05달러의 절반 수준임.
- 현재의 수급 불균형은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와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과잉 생산에 있음. OPEC은 감산에 부정적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및 타 국가의 석유 생산 업체를 고사시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 또한 이란의 등장은 국제석유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이란은 2016년에 일일 최대 150만 배럴 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임.

<국제유가 추이>



자료 : Financial Times

- 2015년 미국 석유 산업계는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음. 2016년에는 자본투자 위축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 IEA는 2016년에도 공급과잉(Supply Glut)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1) 최근 지속적인 유가 하락이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님에 따라 저유가 관련 동향 분석을 2회로 게재함. 본고는 1회차이며 저유가 동향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음.

■ 베네수엘라 · 사우디 등, 저유가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

- 저유가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 대표적 국가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을 꼽을 수 있음.
 - 정부 매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2015년 약 1,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임. 낮은 생산 비용과 고유가에 의존했던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현재의 유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
 - 세계 2위의 석유 매장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수년 동안 연금, 의료, 사회보험, 주거, 식품 보조 등을 위해 석유 수출에 의존해 왔음. 그러나, 2015년 인플레이션율은 150%를 넘었고 올해에는 2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가 침몰하기 일보직전임.
 - 정부 매출의 절반 정도가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오는 러시아는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와 저유가가 맞물리면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IMF에 따르면 러시아 GDP가 2015년 3.8%, 2016년에는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IS와의 전쟁을 위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이라크는 저유가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 일로를 겪고 있음. 이라크는 2015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석유 생산량을 기록했지만 유가 하락을 상쇄하지 못했으며, 매장된 석유의 추가 생산을 위해서는 여전히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임.
 -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산유국이며 정부 매출의 약 75%, 국가 수출의 90%가 석유인 나이지리아의 경제도 난관에 봉착함. 노동자들의 임금 지불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전력 및 연료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음.

■ 중동 건설시장 위축 심화 예상, 시장 다변화 및 보수적 수주전략 필요

- 2016년 하반기에 유가의 점진적 상승을 예상하는 분석이 있지만 생산량 축소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작용하지 않는 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임.
 - 미국과 비OPEC 국가들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분쟁에 따른 석유 증산 가능성, 중국 경제부진에 따른 수요 하락, 달러 강세 등의 요인이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음.
 - 저유가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 건설시장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수적인 수주전략 수립과 더불어 시장 다변화에 집중해야 할 것임.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2015년 주택연금 가입자 11.4% 증가, 지방에서 높은 증가율

- 종신형·전후후박형 가입 증가, 활성화 위한 추가 과제 여전히 산적 -

■ 주택연금, 누적 가입건수 3만 건 곧 돌파

- 2015년 1~12월까지 주택연금의 공급 건수는 5,613건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함.
 - 2015년 1~12월까지 보증 공급액은 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하여 건수와 보증 공급액이 유사한 수준에서 증가함.
-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12일에 최초 출시된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증가세가 유지됨. 2015년 1월 15일 현재 누적 가입 건수는 2만 9,406건으로 2월 중 3만 건 돌파가 예상됨.
 - 공급 건수를 기준으로 2012년 이후 매년 5,000건 이상의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증 공급액은 2013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5년 들어 반등함.

<연간 주택연금 공급 추이>

(단위 : 건, 억 원)



자료 :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지급 유형별 주택연금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건수 비중			보증 공급액 비중		
	종신형	혼합형	기타	종신형	혼합형	기타
2010년	60.4	39.6	-	61.9	38.1	-
2011년	62.8	37.2	-	65.3	34.7	-
2012년	72.1	27.9	-	73.6	26.4	-
2013년	68.7	23.7	7.6	68.3	22.9	8.8
2014년	71.6	21.6	6.8	72.2	20.9	7.0
2015년	78.9	19.4	1.7	81.0	17.6	1.4

주 : 종신형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며 혼합형은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임. 기타 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등이 있음.

자료 :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 보증 공급액 기준 종신형 비중 80% 상회

- 종신형의 가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증 공급액 기준으로는 80%를 넘어섬.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형 주택연금 가입 비중이 2013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여 2015년에는 보증 공급액 기준으로 80%를 넘어섬.
 - 2013년 종신형 가입 비중 증가세가 주춤하였으나, 이는 기타방식 도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며, 인출한도 설정이 있는 혼합형 가입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초기 10년 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 가입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 보증 공급액 기준으로 2015년 지급유형별 비중은 정액형 74.7%, 전후후박형 20.9%, 감소형 4.0%, 증가형 0.4%임.
 -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액형 비중은 2011년 80.4%를 고점으로 감소세임. 반면, 2012년 도입된 전후후박형은 2013년 14.7%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년 대비 수도권(9.3%) 대비 지방(18.9%)의 증가세가 높게 나타남. 특히, 2015년 주택경기가 호조세를 보였던 부산, 대구의 주택연금 증가세가 두드러짐.
 - 보증 공급액 기준으로 부산은 4,037억원이 공급되어 전년 대비 39.2% 증가하였고 대구는 2,186억원이 공급되어 22.4% 증가함.
 - 전년 대비 세종(188.0%), 제주(79.8%), 울산(61.4%), 전남(48.4%), 충북(46.5%)도 큰 폭 증가하였으나, 1,000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공급됨.

■ 내집연금 3중세트 활성화 등 추가적 과제 많아

- 내집연금 3중세트 개발 등 주택연금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령가구 대비 가입 비율은 여전히 낮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자가거주 가구 중 주택연금 가입 비율은 1% 미만으로 추정됨.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을 고려하여 75세 이상 자가거주 가구 중 주택연금 가입 비율은 3%를 상회하는 수준임.
 -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상 60세 이상 자가거주 가구 327만 가구 기준으로 누적 주택연금 가입 건수 비중을 산출함.
 - 최근의 전후후박형의 인기 등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금수령 기간 및 수령 방식을 다양화한 신상품 개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 2015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에 고려 가능한 요소로 연금수령기간 설정의 경직성, 고비용의 부대비용 등을 주택연금의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나, 가입이 극히 적은 60~75세 연령의 소득 감소와 주거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임.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 25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 '제3차 조정소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분쟁조정 심의 의결
1. 26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과 주최, 'EWS 운영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최근 주택 및 토지 시장동향 등 심의
1. 28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과 주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자문단'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자문위원으로 참여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정책국 주최, '부동산 정책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부동산시장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주요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건설 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국정 과제 75번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이하 NCS) 개발 사업을 제시하면서 2016년부터 직업교육에 NCS를 전면 적용하기로 하였음. - NCS의 개발과 적용은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해방 이후 유지된 학교 교육(학력) 중심 인력 개발 정책을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장의 직무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NCS가 되도록 체계적 개발 시스템을 마련하되, 산업별 단체가 개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민간 주도' 개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 현재 개발된 건설 분야 NCS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따른 인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낮은 현장 적합성과 부적절한 환경 분석 및 해외 사례 등으로 경력 경로 개발 및 교과과정 개발 등의 활용에 한계를 가짐. - 건설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건설영업, 계약, 기획, 건설사업관리 등 주요 직무 등이 누락되고 전통적인 기술 및 기능 직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건설산업의 종합적인 인재 양성의 틀(frame)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나아가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매뉴얼'에 제시된 산업 현장에서의 검증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여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또한, 기개발된 NCS 중 건설 분야 주요 직무인 건설공사관리, 건축, 토목 등 3개 분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 NCS에서 노동시장, 자격증, 교육훈련 등 각종 조사 결과가 제시된 직무와 무관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 1차 개설

- 연구원은 2.23(화)~25(목) 3일 간 건설회관 9층 연수실에서 건설업체 관련 실무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들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을 개설함.
- 이번 교육과정은 민간투자사업(BTO/BTL)에 대한 이해와 추진전략, 사업성분석 및 제도 등 실무 중심으로 편성돼 실무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문의 및 참조 : 기업지원팀(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2016년 불확실성과 위기 대처법

모두들 올해는 불확실성이 높고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확실성과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계적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줌 아웃(Zoom Out·멀리 보기)하고 난 뒤 줌 인(Zoom In·가까이 보기)하더라”는 관찰결과를 제시했다.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은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목표나 계획을 언제 변경해야 하는지, 위기의 속성이 변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줌 아웃(멀리 보기)’한 뒤 최대한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실행하는 데 집중하기 위한 ‘줌 인(가까이 보기)’을 했다는 것이다. 그 반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나 건설업체들은 어떨까? 대개는 ‘멀리 보기(줌 아웃)’보다 당면한 ‘현안에 집중(줌 인)’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 건설정책도 사실상 현안에 대한 ‘대책’ 중심이고, 중장기적 ‘정책’은 명확하지 않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은 좋다. 하지만 지금이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인구나 경제사회 구조의 중장기 전망에 기초한 주택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건설업체들도 ‘단기 경영의 덫’에 빠져 ‘멀리 보기(줌 아웃)’를 시도조차 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울 때가 많다. 최근 주택경기가 오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는 기미를 보이자 너도나도 주택시장에 올인해 왔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주택경기가 주춤하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건설업체들도 움찔하고 있다. 주택사업 이후의 신시장 개척이나 신사업 발굴 노력이 크게 강화된 것 같지도 않다. 주택시장이 머지않아 위축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내 사업만큼은 어떻게든 그 전에 마무리할 수 있겠지’하는 막연한 희망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2008년 전후의 사례가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있었다. 향후의 금융여건은 정반대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정부정책도 경기부양보다 구조개혁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도 좀더 멀리 보고 미분양 대책이나 사업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최근의 환경변화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것은 아니다. ‘저성장의 장기화’는 비교적 확실한 환경변화다. 저성장기 생존전략이나 성장전략은 정부도 필요하고 건설업체도 필요하다. 20년에 걸친 일본의 저성장기 사례를 통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저성장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든 건설업체든 보다 멀리 보고 ‘신성장 동력 발굴’과 ‘건설산업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줌 아웃(멀리 보기)한 뒤에 줌 인(가까이 보기)”하는 것이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처하는 법이다. 그 반대가 아니다. <건설경제, 2016. 1. 25>

이상호(원장 · shlee@cerik.re.kr)